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운동과 전교조

권재원(고덕중학교)

I. 신자유주의가 무엇?

몇 해 전부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교육운동의 지상과제인 것처럼 주어져 왔다. 모든 사업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위해 배치되며,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신자유주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과 어떤 관계이기에 막아내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전교조 지도부는 대단히 단순한 논리로 신자유주의는 입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를 강화하여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궁극적으로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겁을 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떤 이데올로기이며 이념이길래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를 막으려면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의문은 먼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1) 시장주의에서 시장화주의로: 자유주의와 도덕의 만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는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학술적 이론이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자유주의가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천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 작은 국가 등을 모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를 공격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즉 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유 시장이 아니었던 공공부문을 시장으로 개조하고자 한다. 자유주의가 수동적 시장주의라면 신자유주의는 능동적 시장화주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었던 영역을 시장으로 개조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주된 대상은 국가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그 동안 비교적 신성시 되어왔던 학문, 예술, 문화 부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시장주의와 도덕을 결합시켰다는 것이다. 자유경쟁, 시장원리는 선이며, 국가주도, 공공부문은 악이다. 이것은 책무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현대 복지국가는 실제로 이런 비난을 받을만했다.

2) 상품화에서 가치관으로: 물신화에서 물신주의로

신자유주의는 단지 시장화 압력의 공격성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념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상품화 뿐 아니라 이러한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 효율, 그리고 이윤의 논리이며 그 수단은 사유화, 사적통제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기반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에의 호소는 그리고 사적소유에 기반한 경쟁의 논

리는 실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그리고 경쟁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논리가 가진 힘이다.¹⁾

3) 공공부문 민영화의 압력

이런 상황은 우파를 공세적으로 좌파를 수세적으로 만든다. 우파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의 지출 감소와 민영화²⁾를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좌파는 기존의 공공부문과 복지지출을 결사적으로 수호하려 한다. 즉 우파는 세금을 깎자고 하고 좌파는 세금 지킴이가 된다. 이러니 우파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요구하고 좌파가 예전의 공공부문을 지키자고 하는 해괴한 구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들은 왜 민영화를 요구하는가?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도덕적 보수주의와 교묘한 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부문이 나태, 복지부동, 책임감 실증으로 모럴 해저드를 보이기 때문에** **분명한 책무성을 부가할 수 있는 민간부분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모든 영역의 상품화와 시장화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문을 집중 공격한다고 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화가 이데올로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공부문은 이들이 공격하는 수많은 영역들 중 가장 거대한 영역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비단 공공부문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상품시장화 하고, 이 논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즉 과거 친밀성, 사적인 영역, 혹은 인격적이거나 영적으로 여겨진 영역에 모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은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시장원리로 세상을 구원하라. 이것이 신자유주의다.

2.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

신자유주의는 마치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자유주의가 엉뚱하게 원시자본주의가 아니라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다.

1) 자본의 익명화

오늘날의 거대자본은 익명의 존재다. 이는 이미 주식회사가 보편화되면서, 또 글로벌 주식시장이 보편화되면서 충분히 예견된 현상이다. 심지어 이미 **마르크스조차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거대자본이 되면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예견 한 바 있다.**

1)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잠재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에 호소한다. 당신이 가난해졌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세금을 환영할 사람은 별로 없다.

2) 이는 필연적으로 감세로 연결된다. 감세는 신자유주의가 민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가장 큰 무기다. 물론 세금을 덜 내는 만큼 궁극적으로 임금도 줄고 시장 지출은 늘겠지만, 비싼 물건은 안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감세로 징수되는 세금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고, 간접적이다.

2) 정보화: 노동계급의 모호화

정보화 혁명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정보화의 결과 수많은 일자리들이 소멸되거나 단순화 되었으며,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대규모 몰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사라진 일자리들은 단순일용직, 3D업종 정도만 남게 되었다. 이는 생산직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은 대대적으로 퇴출되고, 정보산업으로 대체되었다. 정보산업의 지식노동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자본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로이다. 일정하게 소모되고 재생산되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산업노동자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다. 그리고 고용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산업노동자는 단순노무직 외에는 수요자체가 급감하였다.

즉 자본이 확장하면서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소수의 독점자본만 제외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될 것이라던 마르크스의 예언은 빛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할 수 있는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며, 이런 사업장마저도 남지 않은 나라들에서 노동운동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노동계급의 힘이 약해지는 것과 반대로 자본의 힘은 강해졌고, 더 이상 국가부문의 안전판을 이용하여 노동계급을 길들일 이유가 없어졌다.

3) 세계화: 민족국가의 파탄

초국적 자본이 국경을 넘나든다. 지식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한다. 이들은 국적은 가지고 있으나 국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과 노동은 속지주의를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민족국가는 구성원들의 노동을 통제할 수도 없으며 더더군다나 자본을 통제할 수도 없다. 이제 민족국가의 위상은 공공부문이라는 일개 영역으로 축소되었으며 초국적 자본, 기업의 협상 파트너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이는 그 동안 민족국가의 힘으로 구축되어왔던 두터운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점차 재정 압박에 쪼들리게 되는 민족국가는 공공부문을 하나 둘 민영화하고 매각함으로써 연명하는 신세가 된다.

3. 누가 이득을 보는가?: 신지식계급

1) 자본의 주인은 누구인가?

특정 자본가는 아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자본은 수많은 익명의 투자자들이 영킨 거대한 혼합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자본의 덩어리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본의 덩어리에 출자한 투자자들이 이 거대 자본을 통제하는가?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도 않았고, 최대 투자자의 지분도 전체의 2%를 넘기 어렵다(삼성의 이견희 지분은?).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사회주의로의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했다. 즉, 자본가가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니 사회적 통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웬걸? 자본가도 아니면서 자본가 행세를 하는 자들이 등장해 자본의 사회화를 빙자한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전문 경영인들이다. 이들은 익명의 자본을 위임받아 운용한다. 그럼 이들이 자본을 운용하는 근거는? 경제,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신지식계급이라 불러도 좋고 신기술관료라

고 불러도 좋지만, 경영학을 전공한 일군의 지식인 집단이 이 자본의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오호통재라! 자본의 사회화가 해방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보다는, 결국 이는 관료나 경영자의 지배가 되어 새로운 강철세장을 만들 것이라는 베버의 냉정한 분석이 옳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자본의 덩어리를 움직이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경제적 이익 동기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M&A, 기업 사냥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회사의 경영을 맡아 스톡옵션과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들이 계속해서 눈을 번득이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데는 다른 동기들도 작용한다.

이 동기들을 파악하는 데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보다 베버주의가 보다 넓은 통찰력을 준다. 베버는 인간이 다루는 자원이 경제적 자본, 위신(명예), 그리고 권력이라고 보았다. 어떤 사회집단이 이 중 하나 혹은 가지면 중산층이나 지배계급이 되고, 이 중 하나도 가지지 못하면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한다.

현재 초국적 자본을 주무르면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들 신지식계급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아니라 위신에 기반 한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힘은 자신들의 위신을 더 높임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과 타인을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한다. 권력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거나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권력 그 자체만의 달콤함만으로도 충분한 동기가 된다.

이들 신지식계급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인 경제, 경영학을 신비화하고, 이것을 통해 인간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며(생활 속의 경제학),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 논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미끼는 항상 이윤이며, 이윤을 보고자 하는 영역과 집단은 이들의 이른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그물에 걸려, 이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명백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집단이 자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부분의 시장화, 합리화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바로 이를 통해 지배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전문경영 지식인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개발한다.

2) 지식사회: 지식인의 행복권 박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식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지식인이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 경영, 행정 전문가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지배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이윤을 높이고 조직을 합리화 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조작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조작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기실 지식정보사회라는 용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한 집단이 경영학자들인 것이 우연은 아니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이들의 강변은 바로 이들이 자본가들에게 자본 운용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였던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지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철학은 경영학의 시녀이며, 이윤을 창출하는 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다. 철학은 철학 산업, 철학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예술 비즈니스가 되어야 하며, 물론 교육도 교육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식인이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박탈이다. 지식인의 행복은 금전에 있지 않다. 지식인의 삶의 근간은 이론과 실천이다. 자신의 이론이 실행되고 검증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실천은 개인적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그

러나 자연과학 분야를 필두로 지식인의 이런 기쁨은 자본에 포섭되었다. 처음에는 포섭이지만 나중에는 지배·종속관계가 된다.

지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달콤한 유혹이다. 이 유혹에 넘어간 지식인들은 결국 경영 전문가의 노예가 된다. 학자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선택할 수 없다. 펀딩이 잘 되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예술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투자자와 경영자의 재가를 받아서 관객이 잘 드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인은 진실을 보도할 수 없다. 구독율과 시청율을 높이고 광고주를 즐겁게 해주는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지식 영역의 목적이 이윤을 높이는 것이 될 경우, 결국 이윤을 높이는 전문가들이 이 영역의 지휘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 결과 경영학은 과학, 철학, 예술의 기준이 된다.

이제 지식인은 기획하지 못한다. 기획은 어떤 것이 돈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경영진들의 몫이다. 지식인들은 경영진이 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내려 보내는 과업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지식인이 아니게 되었다. 지식사회에서 가장 큰 재앙은 아이러니하게 지식인에게 내려왔다.

4. 교란된 좌파 우: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좌파

이제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는 기존의 좌파와 우파의 질서도 교란한다. 신우파인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영역을 시장으로 환치하고자 하며, 시장이 아닌 영역을 파괴하고자 한다. 그 주된 공격의 대상은 공공영역이다. 민족국가 단위의 계급 타협의 산물인 현대 복지국가의 비대해진 공공영역은 화석화 되었으며 국경 없는 자본의 공격 앞에 무용지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비용만 많이 드는 무용지물을 해체하고 이를 시장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구호는 “낡은 복지국가, 불합리한 공공부문을 혁신하자”다. 이들은 마치 과거 좌파가 자본주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사회복지를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 부친다. 반면 자유시장과 경쟁은 이 만악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처방으로 예찬받는다. 반면 여기에 대항하여 좌파는 “복지국가, 공공부문 수호”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다. 우파가 혁신을 좌파가 수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이미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근대복지국가를 개혁하자고 주장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것만은 지키자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둑으로 치면 좌파가 선수를 빼앗겼다는 의미다. 새로운 의제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은 우파이며, 좌파는 여기에 대한 안티로만 일관한다. 그런데 그 안티의 결과가 기껏 현 상태를 유지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진영의 위기의 근원이다.

5. 신자유주의는 왜 나쁜가?: 인간 삶의 영역의 식민화

그렇다면 혁신적인 신자유주의가 수구적인 좌파보다 진보적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근대 국민국가가 그리고 복지국가가 낡은 화석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과 경쟁이 그 대안이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그 해결의 방법론으로 경영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학과 행정학은 모든 인간을 조작(manipulation)의 대상으로 본다. 이들은 책상머리에서 그린 조직도, 시스템 등의 변화가 수 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작업, 생활, 심지어는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런 조작의 목적이 조작의 대상이 되는 수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행복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과 이윤임을 공공연히 밝힌다. 전통적인 포디즘이든 혹은 보다 진보적이라는 포스트포디즘이든 이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한 걸 같은 현상은 관리자, 경영자는 조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경영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들에게 제한된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나 자주관리에 가장 큰 반대 논리가 이른바 '경영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의 삶의 기쁨과 보람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무르는 것이며, 사람들을 주무르는 것이다.

공장에서 기업에서 충분히 돈과 사람을 주무르고, 경영대학원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이들은 영역을 넓힌다. 공장과 기업이 아니었던 영역을 비즈니스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흡사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침략과 같다. 경영논리, 비즈니스 논리가 침투된 영역은 끝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율성을 상실하고, 이윤과 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경영합리화를 담당하는 집단에 의해 지배당한다.

더 나쁜 것은 일단 이들이 이렇게 진출한 영역은 어김없이 탈속련화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삶의 목적을 이윤추구로 단순화 시키며, 다른 목적들을 모두 이것의 수단으로 삼아버림으로써 삶을 식민화한다. 이윤추구가 아닌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할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며, 마침내 소멸될 것이다. 삶의 지향에서 대안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를 동맹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족, 성 과 같은 문제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론적으로 보수주의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이들은 근거 있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악랄하고 노골적인 착취"에 있지 않다.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노동력에서 삶 전반으로 그리고 인생관과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II. 신자유주의와 교육

1. 먼저 휩쓸고 간 영역들의 변화

1) 본연의 가치 상실

1970년대 경영난에 허덕이던 미국의 언론사는 처음으로 기자출신이 아니라 경영학 출신들을 회사 경영진에 앉혔다. 이후 이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바뀐 것은 특종의 개념이다. 이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특종의 개념 대신 독자들의 눈을 잡아끄는 것이면 무엇이든 특종이 되었다. 그 극단은 범죄 현장이나 체포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라이브 쇼일 것이다. 이제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회의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는 것, 거기에 문학적 가치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문의 구독율이나 방송의 시청율을 높여서 광고주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제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 뛰어다니는 사냥개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법조계나 의료계에도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여전히 의사출신인 원장이나 이사진을 맡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최신 의료기술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많은 병원을 경영난으로 몰았고, 결국 편딩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병원에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나 연구 우선순위는 편딩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분야로 쏠리고 있다. 이제 병원에서 인술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구시대의 유물이거나 국경 없는 의사회로 가야할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탈속련화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의사들의 자율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타격은 예술계에서 나타났다. 화상들은 화가와 공생관계가 아니라 아예 화가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었다. 몇몇 유력한 화상들은 유력한 화가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 활동을 독려, 독촉하며 작품의 방향, 스타일까지 간섭하고 있다. 그림을 “팔아”서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화가들은 이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공연예술의 경우 비즈니스를 전공한 경영자들이 각종 공연기관이나 단체를 장악하면서 섬멸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공연을 팔았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공연 매니저는 정작 그 자신은 공연예술에 문외한이며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좋은 작품을 선택할 눈을 가지지 않았다. 사실은 그런 눈도 필요 없다. 엉터리 같은 작품이라도 이들의 마케팅의 마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관객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와 연출자는 자신의 예술적 소신과 무관하게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전에 기획된 작품을 단지 제작하고 공연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 제작자가 제리 브룩하이머인 영화는 감독이 누구든 간에 다 비슷하다. 이는 제작자가 철저히 감독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왜 한국 영화는 과장된 민족주의 아니면 교복 입은 양아치나 조폭이 판을 치는가?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영역은 영역 고유의 가치가 무의미해진다. 기자에게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에게 인술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예술가에게 아름다움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윤이며, 나머지 가치들은 여기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영역을 구원했다고 자처한다. 적어도 이전보다 이 영역들이 활발하고 바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창작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기쁨에 활발히 활동하든, 해고와 생활고의 위협 때문에 일당을 벌기 위해 미친듯이 활동하든 이들에게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전문성 발현의 기쁨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물어버린 지식, 문화, 예술계는 침체와 나태해 있었는데, 적어도 신자유주의에 정복된 이후 활발히 활동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2) 표준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표준화다. 본디 지식인들의 영역인 학문과 예술은 다양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산물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어렵다. 즉 500부 정도 팔리는 학술서적 10종을 내는 것 보다는 10000부가 팔리는 말랑말랑한 책 5종을 내는 것이 훨씬 이윤이 많은 것이다. 이윤이라는 단일한 척도로 본다면 500명이 관람하는 수준 높은 연극 10편보다 5000명이 관람하는 대중적인 뮤지컬 한 편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산물들은 그것이 발휘된 최고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평균인들의 취향에 맞춰져야 한다. 그 결과 비슷비슷한 유형의 책들, 연극들,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모두 시장에서 무리 없이 판매된다. 물론 각 장르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신자유주의의 눈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탈숙련화

표준화는 그 영역의 모든 산출과 작업이 대체 및 호환 가능한 몇몇 유형으로 압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역시 표준화된 훈련과 능력만 갖추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표준화된 인력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간주된다. 즉 연출자 A를 투입해 제작하던 뮤지컬이 도중에 연출자를 B로 교체했다 하더라도 작품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한다. 이미 작품은 시장의 원리와 마케팅 원칙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작가가 해야 할 역할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작가간의 특별한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의 창조성은 잘 훈련된 표준화된 노동력으로 환치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포드 시스템이 지식노동 영역까지 잠식했음을 의미한다.

4) 경쟁

탈숙련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불러온다. 이 경쟁은 누가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 전문지식영역이 탈숙련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산업 예비군이 증가함에 따라 야기되는 절박한 경쟁이며, 결국 노동력의 댓가를 평가절하시키는 파멸적인 경쟁이다. 경쟁의 규칙은 영역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산출을 얼마나 많이 해 내었는가 하는 정량적 규칙에 따른다.

이제 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은 표준화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설사 더 우수한 품질의 산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준화 척도에 포착되지 않는 한, 혹은 그것이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한 무의미해진다. 모든 경쟁자들의 산출이 동일한 질이라고 가정된다면 문제는 누가 최소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산출을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것은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하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소모적인 눈먼 경쟁이다.

5) 유연화

경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도 탈락자의 퇴출이며, 탈락자가 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연화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과거 자유주의와 달리 이 경쟁과 퇴출의

유용한 고용구조를 도덕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과거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깨기 어렵다. 이들은 유연한 고용, 퇴출, 그리고 경쟁을 직업의식, 소명, 책무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소정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고용안정만을 요구하는 집단을 모럴 해저드로 몰아붙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화, 시장원리 적용, 그리고 경쟁을 통한 효율화다. 그리고 그들은 공교육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보신주의, 불합리한 관행, 낡은 교수학습방법, 게으르고 사명감 없는 교사들, 전혀 개선되지 않는 학생들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한 뒤 그 해결책으로 민간화, 경쟁 등을 들이댄다. 문제는 이들이 제기한 비판이 안타깝게도 옳다는 것이다.

1) 공교육의 부도덕을 공격하는 우파와 옹호하는 좌파: a Comedy

원래 공교육에 대한 비판은 좌파의 전유물이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억압기구론, 부르디외의 계급재생산 도구론,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보울스와 진티스, 더 나아가 학교뿐 아니라 공교육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까지 폭넓게 비판한 애플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공교육은 좌파의 단골 샌드백이었다. 서태지의 '교실이데아'나 영화 '여고괴담'에 열광했던 사람들 중에는 학생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도 꽤 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전교조 운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공교육 기관을 이런 억압기구에서 해방구로 바꾸어 보자는 열망이 아니었던가? 여고괴담의 귀신 역할을 교사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웬걸? 이제 신우파가 공교육을 공격한다. 그리고 공격 내용은 보수주의에서 빌려와서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부도덕성과 잔인함의 사례들은 이미 좌파들이 얼마나 많이 발굴해 놓았는가? 신자유주의는 노고를 덜었다. 단지 그 부도덕이 '공교육이기 때문이다'라고 딱지만 붙이면 된다. 공교육이고 철밥통이고, 따라서 어떤 책무성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도덕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된다. 물론 이들은 국가가 애초에 공교육 종사자들에게 철밥통과 면책의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충실히 복무하라고 그랬음은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교사들은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지 않았는가?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옆드려뻗쳐, 좌로굴러 우로굴러 하면서, 두발검사, 복장검사를 하면서, 애국조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그러니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가장 분개하는 집단이 오히려 늙고 보수적인 교사들임은 당연한데...

문제는 좌파다. 좌파의 관성은 우파가 공격하면 방어하고 방어하면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우파가 공교육을 공격하니, 어제까지 공격의 대상이었던 공교육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 워낙 신우파의 공격이 집요하고 파상적이고 전면적이다 보니 좌파의 방어와 보호도 전면적이고 집요한 것이 된다.

오호통재라! "저런 썩은 선생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술자리에서 울분을 토했던 젊은 시절을 잊어버리고, 전교조는 "단 한명의 교사가 퇴출될 가능성"도 차단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비판했던 전교조가 "교육과정 유연화" 움직임을 구조조정이라며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전교조가 연공서열대로 성과급을 수당화 해서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다. 최근 우파의 주장은 무엇인가? 학교를 바꾸자다. 전교조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냥 이대로다. 교육부와 대안교육세력의 밀월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2) 새로운 상품으로서 교육: 유연화와 표준화의 2중 변주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말 공교육의 부도덕을 개선해서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세우고자 학교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시장적이다(비시장적이니 비도덕적이다). 이들의 진짜 속셈은 국가가 담당하던 교육을 시장으로 끌고와서 한 판 멋지게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이다.

구우파는 학교가 말 잘듣고 일 잘하는 노동자를 생산하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간접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신우파는 학교를 자본으로 삼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 이제 학교는 이데올로기적 억압기구가 아니라 그 자체 자본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면,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오늘날에도 막스베버가 말한 기업가 정신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되는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당신 바보인가?

학교를 경영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결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교육을 잘 하고자 한다면 유형무형의 온갖 정성을 쏟을 것이다. 그 중에는 10 여 년 간 꾸준히 쌓아야 할 교양도 있을 것이고,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 교육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문화나 인성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숙련된 교사는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일상의 언어나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은 교육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철저히 배제된다.

돈을 내는 학부모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학교는 학부모에게 놀라운 성취를 계속해서 확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취를 확인 시킬 수 있는 것만 교육하면 되니까. 학원 강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유능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교사에게 질문하면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질문하면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잊어버려.”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자기가 돈을 내는 학교가 정말 교육을 잘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학교와 비교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같은 교육을 해야 하며, 그것도 수치화하여 비교 가능한 것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교육의 표준화 압력이 행사된다. 사실 한국은 국가수준의 교육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표준화, 획일화된 나라다. 그래서일까? 곰곰이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의 공교육 공격은 학교간, 교사간 경쟁, 학교의 민영화 등에만 집중되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당연히 표준화된 검사인 수능에 대해서도 절대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연화가 가해지기는 한다. 그것은 교사의 밥그릇에 대한 유연화다. 이것은 두 갈래로 나타난다. 하나는 표준화 학력평가와 무관한 과목을 축소,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표준화 학력평가 실적에 따라 교사의 대우나 고용을 유연화 하자는 주장이다. 그럼 학교는 시험에 나오는 과목만 가르치고, 시험에 나올 내용만 가르치고, 급기야는 시험 문제풀이로 수업을 대체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게으른 교사는 퇴출될 것이다. 그럼 된 것이다. 이렇게 공교육의 도덕적 해이는 해결되었다. 학부모들은 자식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학교에 아낌없이 돈을 지불 할테니.

3) 새로운 권력 영역으로서 교육: 경영의 대상

백보를 양보해서 경쟁 시스템이 학교를 활발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치자. 그럼 그 경쟁을 조정하고,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들? 아니다. 그럼 소위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신자유주의자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를 평가하게 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게 만들자고 한다. 하지만 과연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하는 것일까? 실상은 평가도구를 만들고 관리하는 집단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누구일까? 바로 전문경영인 집단과 행정전문가들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현란한 백년지대계 걱정은 이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넓히기 위한 주장인 셈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한결같이 높은 자리다. 생각해 보라. 서른살 먹은 MBA가 어차피 자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석사들인 교사집단 머리에 앉아서 생사여탈을 흔드는 모습을. 그 쾌감은 연봉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의 동기가 될 것이다. 이제 교육도 경영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3. 교사와 교육의 미래는?

이렇게 되면 교사와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서 휩쓸고 간 영역의 잔해를 바라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니 짧게 언급하겠다.

1) 교육의 무의미화: 교육 비즈니스

교육이 학생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것인지,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하는 것인지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교육은 돈을 지불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들이 성적(成績)향상을 원하면 문제풀이를 시키고, 문자를 잘못 이해해서 성적(性的)서비스를 원하면 학교에 매춘부를 둘 수도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도 비즈니스가 된 것이다. 이윤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2) 교사의 단순 일용 노무직화

교사의 노동은 단순한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를 잘 풀 것인가 하는 교수방법 조차 경영진은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아웃소싱 할 것이다. 실제 교육사업에 뛰어든 디즈니는 저명한 몇몇 교육학 교수들에게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모두 의뢰한다. 그럼 이들이 프로그램과 메소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패키지는 디즈니가 운용하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훈련되고 일괄 적용된다. 이게 교사들의 난상토론에 교수방법을 말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더 나아가 서로 비교를 통해 경쟁을 붙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문제는 무엇을 가르칠까는 물론 어떻게 가르칠까도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면 교사는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단순 노무직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를 보라. 자꾸 평가원에 의뢰해서 서술형 문항을 개발한다. 시험문제도 대신 내 준다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 불행히도 정말 평가원이 시험문제 다 낸다고 하면 좋아할 교사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 (조합원 중에도 있을 것이다).

3) 야만의 미래

이렇게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자유주의자의 도덕적 열정과 반대로 도덕과 교양이 사라진 사회가 올 것이다. 교사의 밥그릇이야 깨어져도 좋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회가 적어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필요하다.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주지는 못해도 밥그릇은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교사는 방학이라든지, 얼마 안 되는 노동시간, 그리고 튼튼한 밥그릇을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다. 문제는 이런 교사의 자긍심을 깨는 내부의 적을 스스로 퇴출시킬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새로운 논리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미래에 대해 좀 무시무시한 예언을 늘어놓았다. 당연히 이런 미래는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니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공공부문과 복지국가의 수호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좌파/우파 논리로 그 이상을 주장 할 수도 없다.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우파의 범주를 벗어난 혁신적(!)보수이며 그 근거는 경제가 아니라 도덕에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좌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지점에서 말서 싸워야 하는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좌파의 절박함이 결국 “지금 이대로”라는 자기파멸적 구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좌파의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나 역시 21세기의 마르크스가 될 자신은 없다. 다만 신자유주의 반대는 정치투쟁이나 경제투쟁이 아니라 삶의 논리를 전환하는 것이며 거의 철학의 문제임을 제기하고 싶다. 신자유주의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덕은 새로운 철학을 요구한다. 경제적 이윤을 우선시 하는 삶의 철학을 유지하는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없다. 여기에 현재까지 알려진, 혹은 내가 현재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 논리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과 발전이라는 가치를 따라가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최대한의 개발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구와 인류가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발전주의와 극단적 생태주의의 중간 어디선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이며, 자연인과 최첨단인의 중간쯤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먼저 삶의 모습, 삶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도덕을 재건하는 방법이다.

2. 전문성과 창조성 그리고 몰입(Flow): 노동자의 해방 혹은 노동의 해방

노동의 대가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종류의 노동에만 전문성, 창조성, 자아실현이 있다는 방식도 버리는 것이다.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한 방편은 몰입이다. 몰입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도전할만한 과제가 주어질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현상이다.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이렇게 자신이 향상되어 간다는 느낌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이 향상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노동과 놀이가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포드주의나 테일러주의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오늘날과 같은 세분화된 분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일 단축만으로 해방되지 않는다. 노동 자체가 고역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노동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방된 노동을 할 때 나태와 무기력은 사라지고 작업은 활기를

떠며 이른바 근로자, 기업자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다.

3. 비타 악티바(Vita activa): 공공영역의 부활. 민주주의의 민주화

인간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참여하며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때 비로소 생동감 있는 삶을 산다.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짐승같은 일이다. 불행히도 현대사회는 이런 일을 강요한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한다. 하지만 그 일의 결과물은 결국 생존이상의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공의 일을 할 영역 자체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어버렸다. 이것을 복원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이익, GDP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 역시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비타 악티바, 즉 활동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가치 있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공공 참여의 삶이며 공동체에 자신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다. 이게 꼭 국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일터 역시 훌륭한 공공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을 민주화하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움직이는 참여자이자 주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소외는 극복된다. 소외가 극복되고 공공성을 갖춘 시민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4. 생산의 삶에서 교양의 삶으로

예술계, 문화계, 교육계를 신자유주의가 공격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비효율적이며 투자한 만큼의 산출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인 생산력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날마다 쏟아진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애초에 학교교육은 학생의 생산력을 키우고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의 복원이며 진정한 의미의 보수다. 과거 서당과 향교의 교육이, 혹은 플라톤의 아카데미나 중세에 문을 연 유럽의 대학들이 과연 어떤 노동력, 어떤 생산력을 양성했단 말인가? 기실 생산력 그 자체는 해당 길드의 담당이었다. 직접 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겠는가? 그렇다면 학교는? 학교가 할 일은 젊은 세대가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공통의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을 따를 수 있고, 사회의 규범은 반성적으로 내면화하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통칭 교양이라고 한다. 소양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즉 학교교육이 할 일은 소양교육이지 노동력, 생산력 향상이 아닌 것이다.

공대졸업생이 공장에 들어왔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힐난할 수 있다. 경영대 졸업생이 회사 조직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힐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인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비난할 수는 없다. 차라리 범죄율이 높아진다던가, 국민 문자 해독률이 낮아진다던가, 혹은 사회가 점점 예의가 사라지고, 미덕이 사라지고, 예술적 취향이 저열해진다든가 하는 이유로는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면 생산력, 노동력을 높이는 교육(결국 지식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인데...)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교육에 대한 비난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퍼부음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소양교육, 교양교육의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을 잘 벌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인의 삶보다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사랑하고 이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양인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설사 생산인을 교양인이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인과 함께 교양인이라는 삶의 가치를 새로이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교양이 없다.

5. 혁명적 계급 소멸의 시대에서 지식인 운동: 지구전의 진정한 의미

기든스가 강조했듯이 성찰적 근대(복잡성의 시대)에서는 사회의 모순이 응집되고 총화 된 결정적 전선 따위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세계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대리 계급도 없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일 뿐이다. 사실은 노동자 계급 자체도 모호하지 않은가? 그러니 노동자 계급의 혁명 이데올로기도 우리에게 미래의 상을 그려주지 못한다. 이젠 어떤 천재적인 혁명가가 그려낸 하나의 그림에 모든 계급, 계층이 총력 단결하여 모여드는 시대가 아니다.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시대다. 누구를 강력히 타격하면 사회 전체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정적 급소는 없다. 국가 권력만 장악하면 절반은 될 줄 알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국가권력조차 이 복잡한 사회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혁명은 결정적인 한 판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 여러 진지에서 제각기 이루어진다. 신자유주의는 교묘하게 이 진지들을 하나하나 시장에 굴복시키는 자본주의의 게릴라다. 그런데 좌파는 아직도 게릴라인 상대방의 지도부를 찾아 단 판의 승리를 꿈꾸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진지들은 아직 여러 군데 남아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이런 진지를 지키면서 서서히 영역을 넓혀나가는 지구전이다. 이 투쟁들은 위계화 되어있지 않다. 모든 투쟁이 중요하며 이 투쟁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확장되는 것이다. 단번에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한국을 보라!

지식인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과거와 다른 지위를 부여받는다. 지식인 운동은 신자유주의의 도덕성(!)과 효율의 허구를 폭로할 수 있다. 또 지식인 운동은 이윤과 효율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을 그려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찰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과거 프롤레타리아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지식인의 해방이 사회를 해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방구로 남아있는 지식인의 진지는 투쟁의 가장 중요한 보급창고가 될 것이며, 이윤과 효율 앞에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IV.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교육운동

이미 충분히 파악했겠지만 신자유주의는 단지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이며 우파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는 신우파다. 신이란 글자가 붙는 이유는 누차 강조했지만 이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시장주의에 부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으로 부딪친다면 이는 진보진영의 부도덕을 드러내고, 그들이 옳음을 증명하는 결과다.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덕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폭로하고, 시장이 도덕을 회복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오늘날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이 분명 모순이 있고 많은 문제점과 부도덕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그들의 비판은 인정하면서 처방은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비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가 오히려 수구가 되는 것이다.

1. 마지막 독립영역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함락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진지다.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츰차츰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교육운동이 노동 운동을 위해 복무할 상황이 아니다. 운동에 위계 따위는 없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공격할 수 있는 지식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또 신자유주의의 먹이가 되는 이윤만 추구하는 1차원적 인간의 생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진지이며 요충지다.

교육은 자신이 독립된 영역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교육이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효율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표준화와 경쟁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된다.** 철학적 논쟁은 정답이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도 정답이 아니다.

2. 대항의 교육학을 세우자: 존재 자체가 신자유주의 친화적인 기존 교육학

교육의 고유의 전문성과 학문성은 이 영역의 독립 유지에 필수적이다. 신자유주의 경영자들이 병원 원장이나 법무법인 대표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인이 함부로 담당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 교육은? 5000만 국민이 모두 교육자다. 모두 교육에 대해 한 마디씩은 할 수 있다. 그게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이 튼튼히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류 교육학은 애초에 인간을 조작의 대상으로 보고 과학적 효율적 관리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경영학, 행정학과 대단히 친화적이다. 여기에 대항할 인간주의적 교육학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에서 인간자본론이 들어설 자리를 밀어 내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서 승화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그리고 그 기록이 공식화될 때 그것이 바로 대항의 교육학이다. 이렇게 실행자 중심의 교육학이 튼튼히 설 때, 이 성과는 다른 영역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이 이윤과 시장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을 분명히 수립할 때 신자유주의는

발 디딜 곳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토론에 부쳐야 한다.

앞으로 희망하는 사회와 삶의 모습/ 이것을 위해 필요한 인간의 상/ 여기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 환경 및 방법/ 이를 위해 적합한 교육자의 모습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세상을 원하며,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육문제의 시작이다. 이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이라는 경제논리로 풀어낼 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이 역시 철학적이며 매우 심도 깊은 논쟁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교육문제가 심플하지 않음을 드러내어야 신자유주의의 침탈을 막을 수 있다.

3. 교수의 한계: 교육학 생산자로서 교사

이런 점에서 교수와의 연대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는 미묘한 문제다. 교수는 주류 교육을 공부하였고, 교사와의 위치에서 조작자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위치를 고수하는 교수는 연대에서 제외해야 한다. 미국에서 교육학 교수는 첨예하게 두 그룹으로 갈라졌다. 한 그룹은 신자유주의 경영진이 운용하는 자본의 편당을 받아 교육기업(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부를 누리는 집단이며, 다른 그룹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여 교육 본연의 길을 찾고자 하는 집단이다. 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교수는 독자적인 세력이 되지 못한다. 자본의 편당을 받던가 아니면 교사집단의 편당을 받던가이다. 따라서 교육학 교수들의 위상은 전혀 주체적이지 않으며,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신자유주의 경영진과 교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존재다.

따라서 교육학교수(학자)에게 교육학을 의존할 수 없다. 교사는 마땅히 자기 교육학의 주인이 되어야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설사 남의 교육학을 소비하더라도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되어야지 부가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교육학의 생산자로 일어설 때, 나태하고 안일하고 진부한 교육은 혁신될 것이며, 이런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을 근거로 가해진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무디어질 것이다.

4. 모든 지식인들의 단결 거점: 노동자를 지식인으로

모든 영역의 지식인들이 교육운동을 매개로 단결할 수 있다. 가장 수가 많고 조직화가 잘 된 지식노동자인 교사와 그들의 조직은 이런 단결의 거점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인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를 지식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혁명이다. 즉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는 존재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향상시키는 능동적인 노동자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부문이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주인 의식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타락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민영화된들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인이 아니다. 경쟁을 시켜서 유도한다고? 그럼 암묵적 동의하에 형식적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노동에 직접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와 무책임을 극복하는 도덕적 해결책이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며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5. 반성과 구조조정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민중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는 뼈저린 반성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즉 무작정 공교육을 지키자고 해서 안 된다. 공교육이 그리고 거기 종사한 교사들이 분명 뭔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교육이 획일적이고, 창의성을 말살하고, 열등생에게는 절망을 우등생에게는 권태를 선사했고, 교사들은 안일하고 나태하고 권위적이고 심지어는 변태들까지 섞여 있었다. 그러니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 **공교육이 엄연히 잘못 되었고, 교사집단이 엄연히 나태하고 무능한데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건 좌파에 대한 모독이다.**

도대체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왜 우파의 손으로 비판받아야 하는가? **교육운동은 먼저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누워서 침을 뱉어야 하는 것이다. 도저히 교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도저히 교육을 위한 체계라고 보기 어려운 체계를 교육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개혁을 요구해야 하며, 교사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교사 퇴출을 스스로 먼저 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란 말에 알려지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구조조정의 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시장화와 경쟁이 그 해답이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V. 교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운동의 주체는 여럿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당연히 교사다. 앞에서 제시한 교육운동의 위상에 근거하게 되면 교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

1. 지식의 생산자이자 실천자: 해방과 번잡함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자다. 교사는 존재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그럼 교수가 주인이 된다), 생성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다. 생성되는 지식은 도서관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들의 생각에서 그 단초가 나타나는 지식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기획자이자 집행자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교육의 기획자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번잡함을 수반한다. 이는 가르칠 내용도 생산하고, 가르칠 방법도 개발하거나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예 교사는 편안하다. 내용도 방법도 레디 메이드다. 그 대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가르침의 즐거움에서는 멀어진다. 그저 월급날이나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주인 교사는 그런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 퇴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행복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느낄 것이다. 이런 행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전적 손해마저 감수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경제투쟁을 극복한 높은 차원의 경지다.

2. 전문직: 긍지와 책임

이것은 결국 전문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직은 높은 소득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숙련과 고도의 도덕성³⁾이 요구되는 분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경쟁의 논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직으로 서야 한다. 많은 교사들은 전문직으로 불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높은 숙련과 고도의 도덕성을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교사가 전문직이 되는 것은 위세를 높이는 장식물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비즈니스 종사자가 아닌 교사로 남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다.

교사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단련해야 하며,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책무성이란 말만 들으면 알려지 반응을 일으켜서는 절대 전문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책무성을 관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이 책무성을 표준화된 수치로 측정해서도 안 된다. 이 책무성은 전문가들끼리 신랄하고 치열한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솔직한 질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직은 자신의 고도의 윤리를 스스로 해결한다. 즉 집단의 물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교사 역시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스스로 물 관리를 해야 한다. 그 결과 일부 교사가 제거될 수도 있다. 그때 당황해서는 안 된다. 낮은 숙련과 무대포 책무성을 가진 자는 애초에 교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3) 이 도덕성은 경로효친 등등의 일상적 도덕이 아니라 높은 책임감, 자기관리 같은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다.

전교조 운동 초기에 우리는 “저런 놈들이 어떻게 선생이야?”라며 울분을 많이 토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저런 놈들이 여전히 교단에 남아서 설치고 있다면 그건 우리도 잘못된 것이다. “저런 놈들을 축출”하는 것 역시 교육운동이다.

3. 학생을 높이라

학생의 권리가 신장될 때 그 보호자로서 교사의 권리도 신장되는 것이다. 관료제 최말단의 설움을 그 하나 아랫단계의 학생을 상대로 해소한다면 이는 어른들 중 최 말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불행히도 많은 교사가 그런다). 오히려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 교사의 위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계 자체가 붕괴한다. 수평적 위계들 속에서 지식인은 가장 행복하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하찮은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도록 강고하게 요구해야 한다. **학생의 목소리가, 그들의 인권이 서면 학부모의 주머니만을 준거로 삼는 신자유주의는 강력한 저항세력, 사실상 맞서기 어려운 진정한 교육수요자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높아진 학생의 위상, 그리고 진정한 학생의 수요는 교사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때 희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탐대실의 결과가 올 것이다.

4. 민중교육의 수호자

누가 뭐라 해도 공교육은 사회평등과 복지 수단이다. 공교육은 모든 2세들이 동등한 자격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초에 공교육은 산출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 재능 있는 학생도 깎아서 하향평준화 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다. 그 외 재능 부분은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개발 과정을 두면 되는 것이다.⁴⁾ 그런데 평준화나 기타 공교육에 대한 공격은 이 평범한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교육은 절대 개인의 능력개발과 인적자본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한국의 양아치라 할지라도 미개부족의 엘리트보다 높은 지적,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공교육의 힘이다.

그런데 작금의 공교육 비판은 누구를 대변하는 목소리인가? 그것은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계급재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중산층 학부모와, 그들의 주머니를 털 기회를 노리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목소리다. 수월성 교육, 경쟁을 통한 학력 신장 등등.... 진정 민중의 아이들에게는 남의나라 일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외국인 2세들 역시 이런 교육담론에서는 소외된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자기들 원하는 교육을 알아서 받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공교육에 그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어렵고 소외받고 탈락하기 쉬운 그런 아이들을 번듯한 시민으로 만들어 장차 경쟁이 보다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긴 미국의 NCLB라는 정책 역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4) 사실은 그 분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악에 재능있는 아이는 예술학교가 아니라 예술단체에서, 과학에 재능있는 아이는 과학학교가 아니라 과학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야 한다. 어차피 전체의 5% 이내의 아이들이 아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교육이다. 학부모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5퍼센트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교육 기관에서의 수준별 학습이 낡은 것이라는 것이다.

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니 이 논리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참된 민중교육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작금의 교육논란에서 수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VI. 한국 교사의 실태는?

이제 한국의 교사들이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인 최신의 서베이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 교사의 상태는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 있다. 한국 교사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시들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스스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한국 교사의 고통

불과 5,6년 전만 해도 한국 교사의 고통이라고 하면 박봉과 격무, 그리고 낮은 사회적 지위를 꼽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사의 경제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며, 노동일과 노동시간은 모든 다른 근로자(전문직을 포함하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적으며, 사회적 지위도 현격하게 상승했다. 80년대만 해도 사범대학에 딸을 보낸 학부모는 사범대학생과 딸이 연애해서 선생하고 결혼할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생이라는 이유로 예비 장모에게 괘시받는 남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사들은 생기가 없고 시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 전문직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음흉하게 자행되는 장치들

교사는 전문직이다. 다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임용 과정도 까다롭다. 그러나 정작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말짱 헛소리다. **아니 본인은 전문직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전문직에 준하는 책무성만 강조되니 스트레스만 높아진다.**

왜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교사를 그리고 학교를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한다는 권력의 쾌감으로 마스터베이션을 하려는 교육 관료들의 분탕질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기획 하는 자가 되고 교사들을 단순 집행자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음모는 얼마나 유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들은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들, 관변학자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이 만든 내용과 절차를 교사가 있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요한다.

옛날 교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 교과서를 덮어버리고 호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담임선생님 이야기, 진도는 잊어버린 채 역사이야기만 구수하게 풀어내던 늙으신 선생님 등의 추억담들이 있다. 필경 그분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겠지만 기획하고 집행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학교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교과서 가르치던 내용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진도 외의 이야기 활동들을 즐겁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추억을 많이 남기는 선생님은 교과서 하다말고 삼천포로 빠져서 한 시간 내넌 삼천포에 머무르는 선생님이다. 왜 그럴까? 실제 교사가 삼천포에서 더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이며 학생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간이 갈수록 삼천포로 갈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교육과정은 재량을

준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사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항목과 수치만 늘려놓았다. 커다란 백지에 손으로 “훌륭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쓰는 교사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온갖가지 누가기록을 마우스를 딸깍대며 입력하는 교사가 스스로를 단순노무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의 조직표를 보라. 교감과 같은 자리에 행정실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교사가 4년만 근무하면 행정실장과 동급이다. 그러나 학교 그림표에서는 육성회 잡급과 같은 위치에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내려오는 공직자 근태 어찌고 하는 공문은 “네가 전문직이라고? 꿈 깨라. 너는 말단 공무원이다.”라고 웅변한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교육이 점점 표준화되고 마침내 전국 공통의 학력평가로 학교를 비교 평가한다고 나서면, 교사의 교육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의 답이나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하면서 누가 자신을 전문직이라고 여기고, 누가 행복한 일이라고 있다고 여기겠는가? 학원 강사는 문제 많이 맞추면 돈이나 벌지.

2) 현실과 제도의 모순

교사는 모순된 위치에 있다. 좋은 나쁜 차라리 어떤 분명한 위치에 있으면 차라리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 교사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자율적으로 노동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다. 학교장은 구청장이나 관공서 기관장처럼 직원들에 대한 구속력이 거의 없다. 학교의 대소사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사들의 여론이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실제 영향을 준다. 교사는 근무시간에 대해 간섭받지 않으며 출근부도 없고 각종 잡다한 일지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처우가 권리로 주어지는가?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교사는 매사를 하나하나 규제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말단 공무원이나 노동자처럼 자리 잡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율적인 삶과 노동을 즐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교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해서 누군가가 시종일관 체크하지 않는 한 교사를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게 교사 자율성의 비밀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갖가지 쓸모없는 페이퍼 워크이다.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또 정해진 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직접 통제 할 수 없으니, 이를 각종 공문보고를 통해 통제하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이런 공문보고내용과 실제 교실에서 행하는 수업이 크게 다르다. 안해도 한 것으로, 한 것은 안 한 것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공문보고를 함으로 인해 교사는 교실에서 느꼈던 자율적 노동의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 실효성이라곤 전혀 없는 각종 페이퍼 워크(단순한 서식을 대충 채워야 하는)은 교사가 사실은 자신이 통제받는 관료제의 부속품임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렇게 교사는 모순된 위치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주어진 품만 채우며 정해진 것만 하며 매사를 규제받는 관료제의 말단인가, 아니면 자신의 나름대로 노동을 행하며, 그 과정에 대해 간섭받지 않는 전문직인가? 자기개발에 열심인 교사일 수록 이 혼란과 갈등은 가중된다. 교실에서 신나는 수업, 교무실의 권위적인 배치. 학교 밖 각종 단체에서 대접받으며 참석했다가, 학생 거주지 동 기호 조사 따위의 단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의 기묘한 콘트라스트.

이 모순은 사회적으로도 나타난다. 사회는 교사를 전문직으로 부르면서 노무직으로 대접한다. 즉 전문직에 요구되는 의무는 비전문적 방식(여론 재판)으로 요구되면서, 정작 전문직

의 당연한 권리인 자율적 기획과 노동의 기회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실제로 전문성 있는 역량을 보이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걸 이유로 영원히 그럴 것이라 재단할 수 없는 일이다. 설사 교사들이 전문성 있는 역량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 할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틈새를 교대, 사대 교수들, 뇌동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꺾차고 교육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골빈 부자가 아무 단체나 동네 학원이나 만들고 대충 돈 벌고 무슨 무슨 교육연대 하나 만든 다음에 교육전문가로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의 불행은 더욱 깊어진다.

3) 기획하지 못하는 실행(이론과 실천의 분리)

교사의 전문성 발현기회 차단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획을 박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더욱 악화되어 실행의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범위마저 좁아지고 있다.

자신이 기획하고 선택하지 못한 일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인간은 지루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몇 달이고 몇 해고 계속되면, 결국 일 그 자체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일의 결과 받게 되는 돈이 목적이 된다. 즉 일 하지 않는 시간동안 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소외 현상이며 많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교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수업과 지도라는 일하는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공강 시간과 방학이라는 일 하지 않는 시간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휴가가 길고 비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 하는 시간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하다. 교사들은 촘촘하게 작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그리고 동학년 동교과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상호감시에 의해,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학교 관리자들과의 압력에 의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4) 자유의 공포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이 촘촘하게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재, 표준화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의 수동적 적용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선호하는 교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사가 여기에 답답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뚫고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만약 스스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거나 선택하고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면 만만치 않은 자료구입비 등 금전적 지출과 연구시간 등 여유시간의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은 적지 않은 월급과 많은 여유시간을 즐기는 중산층의 안락함을 흔드는 것을 터부시한다. 따라서 교육방법의 혁신, 참교육 등을 주장하는 교사들을 대놓고 반박하지는 못하더라도 은근히 백안시 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혁명가를 고발한 농노처럼.

이는 프레이리가 말한 노예들의 자유에 대한 공포다. 오랜 노예생활을 한 사람이 주인의 가치관을 내면화 하듯이, 교사들은 교육 관료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최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거부감을 보인다 해서 그들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 관료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부감이며 새로운 것은 일단 거부하는 학습된 보수주의에 다름 아니다. 만약 신자유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며 정착한다면 그들은 경영자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공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귀차니즘이다.

5) 성장 기회의 차단

교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아무리 커리어가 증가해도 내면적인 성장과 외적인 존경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년의 위기와 겹칠 때 무시할 수 없는 파괴력을 보이며, 교사의 만성적인 귀차니즘의 근원이다. 도대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누적되는 명예와 보람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면 귀차니스트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로티는 학교교사의 가장 큰 문제로 일상적인 수업과 지도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수업과 지도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 교사는 보통 학생을 상대로 보통의 수업을 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런데 많은 교사는 문제아라든가 수재같은 특별한 학생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교육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 축적되는 보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사가 수십 년의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래서 중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느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심리적인 시들어감이다. 많은 교사들이 중년기에 이르러 심리적 시듦과 승진 혹은 대학 교수되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선다. 아니면 취미생활을 통해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는 길이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정체성을 교사가 아니라 '엄마'에 둬으로써, 즉 교직을 일종의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간주하면서 이 위기를 통과한다. 현 상태에서 교사로서 늙어가면서 시들지 않을 방안을 찾기는 무척 어렵다.

2. 한국 교사의 문제

한국 교사들이 받고 있는 고통들을 살펴보았다. 반복되는 고통은 인성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 교사들의 누적된 고통 역시 교사들의 속성을 이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국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들을 내면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그 중 심각한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교직관의 부재

교직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자관 등의 견해들이 있어왔다. 이 중 한국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직관은 과연 무엇인가?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하지 않고 파편화 된 것은 교직관의 차이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직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행동으로는 관로제의 말단으로서의 위치에 순응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내심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사, 변호사와 대등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지도 못하며, 또 전문직에 요구되는 자기개발, 윤리, 책임에 민감하지도 않다. 교사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라는 고민 자체가 부재하다. 이는 결국 스스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람 없고 따분하게 만들며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된다. 한국 교사의 높은 업무 스트레스는 능력을 뛰어넘는 높은 성취목표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의미 없이 반복하는 작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이를 버거워하기 때문이다.

2) 비전문성

성장기회도 없고, 기획할 기회도 없는 교사들이 무늬만 전문직이고 실제로는 전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비전문성은 아마추어리즘을 불러온다. 실제 한국 교직은 아마추어리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성인들은 자신이 학생 시절 경험한 교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가 저 정도의 일이라면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을 때 “다 잘라 버리고 새로 뽑아” 라는 시민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일으킨다면 분명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게다가 교사들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초중고 교과서를 찬찬히 읽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은 가르침에 적당한 내용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내용에 따라 또 학생의 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 개발하는 것이지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입아프게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실제 교사들이 이렇게 해왔는가? 교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해 오지 않았다. 그들은 정상적 성인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왔다. 한국 교사들은 전문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교직 자체도 전문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왔다.

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괴이한 결합

한국 교사들은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며 이기주의자다. 따라서 이익과 관련해서는 집단적으로 뭉친다. 그러나 수업, 연구, 개발과 같은 영역에서는 철저히 개인주의로 일관한다. 이 개인주의는 타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무관심,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비교육적 횡포에 대한 무관심, 자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적 활동과 최신 교육학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모습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학생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교사의 선택권이 축소된다거나 혹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력이 가해지거나, 기타 안락함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조치가 나타나면 무서울 정도의 집단성을 보여준다. 교원정년단축 반대, 성과급 반대 등에는 높은 동원력을 보여주는 교사운동이 정작 참교육 실천,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해서는 초라하게 축소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풍토는 신규교사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 신규교사들은 자신의 첫 마음의 열의를 받아줄 상대를 만나지 못하며, 자신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줄 고참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들의 고독함은 결국 자기들끼리 모임으로써 정서적으로 해결되며, 그 결과는 학교마다 교사들이 연령대별로 또래집단을 이루는 불행한 현상이다. 물론 이런 또래집단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다. 이런 집단에서 오가는 대화는 육아 이야기, 특정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험담, 쇼핑, 연예 이야기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내면화된 노예

한국 교사들은 철저히 노예의 도덕을 내면화 하고 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교장이나 관리자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른바 부장회의의 지루한 독백은 무엇인가? 실제 법으로는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교장이 아직도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교사들에게 내면화된 자발적 순종의 근성이다. 여기에 대해서

는 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자.

3. 희망의 씨앗: 자발적 수평적 운동의 발생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희망의 씨앗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고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공식적 단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이는 어떤 교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어 지기도 하고, 어떤 연수가 끝난 뒤 문제의식을 공유한 교사들끼리 결성하기도 한다. 이런 단체들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직은 앞에서 예시한 문제점에 완전히 찢어 버리지는 않은 교사들이 제법 있음을 보여준다.

VII. 그럼 전교조가 할 일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불러올 위기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계가 그리고 교사가 해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한국 교사들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 조직은 전교조다. 그런데 그 전교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운동 전반의 위기이며, 교육계가 신자유주의에 넘어가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중 모두의 위기다.

1. 운동 패러다임의 전환

최근 전교조의 위기는 사회 변동에 다른 운동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전교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거대 진보단체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 중앙집중식 운동의 종언

애초 운동단체들의 거대화는 자본의 집중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자본이 계속 집중되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마침내 국가와 거대자본이 하나의 거대한 지배블록을 형성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로 형성되기 때문에 민중운동 역시 각 분야별 운동이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저항블록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고전적 혁명이론에 따라 각 분야 중 노동운동이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하지만 마르크스도 예견했던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는 국가로 집중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개개의 전문경영인과 전문가들에게 분산된 자본주의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분산된 전문영역 중 하나로 전략하고 말았다. “딱 한 놈만 패는” 전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천지로 흩어진 각 분야들은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수도를 함락함으로써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적의 진지들을 하나 하나 함락시켜 나가야 끝나는 전쟁이 된 것이다. 이미 자본의 진영은 여기에 적응해서 게릴라 전술로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라. 이는 군사독재 시절과 구별되는 날렵한 게릴라의 모습이다.

이는 거대 운동단체로 계속해서 집중되어온 민중운동에 경종을 울린다. 모든 진보세력이 이를 구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여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진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이슈는 이 다원화 시대에서 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의 이슈는 교육의 문제이며, 문화의 이슈는 문화의 문제, 정치의 이슈는 정치의 문제일 뿐이다. 상대가 게릴라로 나오는데 주력부대를 찾아 헤메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게릴라가 날렵하게 전선을 옮겨 다니는 반면 거대 운동조직은 발걸음이 무겁다. 결국 거대 운동단체는 아직 그 외형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 동원력이나 영향력에서는 미미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게 되었다.

2) 수평적/자발적 운동의 네트워크화

이제 운동 역시 게릴라전으로, 그리고 적의 진지를 하나하나 함락시켜가는 끈질긴 지구전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운동조직은 그 둔한 몸집을 이끌고 스스로 전선에 나가는 것 대신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군 게릴라들의 통신센터가 되어주고, 보급창고가

되어주어야 한다.

다행히도 거대 운동조직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운동 단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의 네트워크, 이들 간의 정보교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역할에 매우 적합하다. 예컨대 대안적 교육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동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전교조다. 물론 정부를 직접 상대로 하는 전국단위의 사업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업을 모든 투쟁을 다 하려고 해서는 점점 다원화되는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때 전교조는 연결만 시켜주고 지원만 할 뿐, 이들 운동들을 지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와 이들 부문 교육운동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더 나아가 전교조 조직 자체가 이런 수평적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하며, 지금 같은 계선조직으로는 여전히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다.

2. 전문직 조합운동

정작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곳은 투쟁이 아니다. 투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전교조는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켜주고 지원할 뿐 더 이상 그 무거운 몸으로 일일이 쫓아다니기 어렵다. 그 대신 전교조는 이들 각 부문운동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해야 한다. 그 자원은 물질적 자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자원이다. 전교조는 이론과 논리를 생산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고 각 부문 운동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교조가 조합원들을 동원해 그 수의 위력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편당과 위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직 조합으로 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일반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고, 전교조는 그 조합비를 바탕으로 교사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의 위상을 든든하게 만들 각종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위상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1) 비판자에서 생산자로

전문직 조합운동은 물론 비판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은 스스로의 지식을 생산 하는 자이며, 이런 지식의 생산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학이론의 터전이 되지 못하는 변협, 학술대회 하나 개최하지 못하는 의협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교조 역시 10만에 가까운 전문 지식인들의 조합이라면 거기 걸 맞는 학술적 생산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익단체가 아니라 교육단체로 출발한 전교조의 교육학 생산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반면 출발부터 이익단체였던 AFT나 AEU가 활발한 교육학 생산주체로 서 있는 모습은 쓰디쓴 아이러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안 없는 집단이며 반대만 하는 집단이며, 최근 신자유주의의 예리한 공격의 무기인 도덕성의 칼날까지 맞고 있는 현실이다.

2) 엄격한 자기 통제와 권위의 확보

전문직은 자신의 전문성의 대가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한국의 교사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위해서는 항상 전문성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항상 자신의 기능과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직 조합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것이다. 전문직 조합은 조합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이 최신의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와 비판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 기능이 현격히 뒤떨어지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조합원은 책임지고 갱신시켜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퇴출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권한 밖이라면 조합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전교조는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교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며 도덕성은 높은 편이지만 고루하고 낡은 윤리를 고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한국 교사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교사들이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 대우의 대가로 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그리고 그 기여를 위해 스스로 엄격하게 조합원의 품질관리를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권위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협상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전문직 프로젝트라고 한다.

3. 신자유주의 침탈의 격퇴

1) 전문적 영역 수호

교사조합이 전문직 조합으로 굳건히 설 때, 교육은 고유의 논리와 고유의 원리가 작동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는 비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을 막아 낼 것이다. 또 교사조합이 전문직 조합의 기능을 다한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신자유주의 공격의 또 다른 축도 막아 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침탈은 힘 싸움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침탈은 항상 도덕과 효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저 따위 일 하라고 내가 세금을 냈단 말인가?”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무기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의 대결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배심원이 있는 대결이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배심원 앞에 최대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신자유주의의 침탈은 격퇴된다. 교사는 전문직으로 고유의 영역을 지킬 자격이 있음을 배심원에게 입증해야 한다.

2) 지식과 전문성의 후원자이자 터전

자본에 굴복하지 않은 지식인의 후원자와 그들이 활동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많은 지식인들을 실용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전문직 프로젝트는 가뭄 끝의 비가 될 것이다. 실제 교육은 다양한 교과목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듯,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영역을 망라한다. 또 교육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을 매개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학문, 예술분야의 진보적인 학자와 작가들의 후원자이자 무대가 될 수 있다.

실제 전교조가 교육계만 대표한 적은 거의 없었다. 1990년대 전교조는 모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운동 세력들이 모여들 공통의 깃발을 제공해 주었다. 2000년대 전교조는 이와 반대로 모든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세력들이 단결할 공통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이제 전교조는 다시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순수한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구심점이 되어주어야 한다.

4. 이익단체로서 활동

이런 중요한 역할들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교조는 어디까지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1) 가르치는 일이 보람이 되는 터전 확보

전교조가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물리적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적당한 량의 노동시간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전문직 운동은 여론이라는 배심원에게 사형선고를 받는다.

전교조가 주장하고 옹호해야 할 교사의 이익은 주로 위신, 명예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는 비록 박봉이더라도(사실 박봉도 아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보람이 있도록, 또 교사가 이런 일에 전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가 교사로서 늙어가면서도 성장할 수 있고, 축적된 업적을 보람있게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확보해야 한다. 수석교사라는 명예직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교대, 사대에 압력을 가해 충분한 연구와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교대, 사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갈수록 보람과 기쁨을 느낄 계기들이 있어야 한다. 평교사로 늙어감이 보람있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곤란하다. 이를 이끌어낼 계기도 필요하고 보상도 필요하다. 이는 중년 조합원 탈퇴의 원인이기도 하다. **모든 교사를 조합이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무분별한 평등주의는 위험하다.** 전교조는 성장하고자 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지키고자 하는 교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2) 전문직으로서의 대우 요구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는 높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업무에서의 폭넓은 자율성이다. 물론 이 자율성은 강한 책임과 관계되어야 한다. 즉 전교조는 교사의 업무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책무성과 관련한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전문성 갱신을 위해 교수에게는 연구실적을 요구하지만, 교사에게는 연수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교수는 스스로 공부하지만 교사는 강제로 시켜야 공부한다는 대단히 모욕적인 처사다. 따라서 전교조는 연구실적, 연수시간, 사회활동 등을 포괄한 전문성 학점제를 요구해야 한다. 즉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수를 받거나, 구체적인 사회활동을 하거나 모두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논문발표 학술대회나 학술지, 연수프로그램,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3) 조합원들에게 비타 악티바의 기회 제공

아무리 참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공동체, 어떤 전제된 전체 집단에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집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소외된다. 이것은 마르크스 소외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적 존재로서 인간의 문제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이 소외를 극복하고 의미있게 참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즉 **평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을 움직이고 자신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인간은 이런 공공의 삶의 참여함으로써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폴리스가 되어주어야 한다.**

사실 모든 노동조합이 결국 담당했던 역할이 이것이다. 노동조합을 단지 이익집단으로만 본다면 해고나 무노동무임금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참여하는 노동자의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쾌감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합마저 간부위주로 움직이면서 평조합원을 소외시킨다면 그 조합은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망실하는 것이다.

4) 전문직다운 운동방법의 개발

전문직 조합은 투쟁방법, 운동방법에서 이미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 생태운동이 보편화된 계기가 된 것은 3보1배였다. 이는 비폭력적이고 우아하며 생태주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훌륭한 투쟁방법이었다.

무조건 많은 수가 모여서 힘이 형성되면 힘으로 밀어붙여 이길 것이라는 무식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모든 민중이 같이 모여들 전선은 없다. 어차피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방관자나 배심원이다. 문제는 이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사들의 조합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투쟁해야 한다.** 단순 노동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노동자로 불리는 표준화된 영역이다. 그러나 전문직은 업종에 따라 다른 관점과 기준이 적용된다. KTX승무원들의 파업농성은 많은 동정표를 얻는 반면 간호사들의 파업농성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속성이 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잘 이용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할 때는 무자비한 폭력과 무노동 무임금 같은 순전 물질적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계나 문화계를 침탈할 때는 항상 학술적인 형태를 취한다. 논문으로, 데이터로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학술적인 발표회장을 물리적 완력으로 공격하고, 삭발 단식에 농성 난입. 이런 모습은 교사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교사들이 교사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투쟁할 때 배심원들은 고개를 돌린다.

물론 어떻게 싸우는 것이 교사스러운 것인지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다. 우선 일상적인 학술발표대회, 콜로키움 등이 전교조의 이름으로 많이 개최하고, 여러 학술, 문화 행사에 전교조가 패트론으로 참여하고, 각종 지자체의 봉사활동에 적극 조합의 이름을 걸고 나서는 등 이미징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런 일상적인 이미징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술이 될 것이다. 이런 이미징이 누적되었을 때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대변인의 논평 한마디가 더 위력적이 될 것이다. 이때 대변인 논평이 붉은 머리띠 매고 격앙된 어조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지적인 유머도 포함되어야 하며, 고전으로부터의 적절한 인용과 교훈적인 경구도 다소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집단행동이나 집회가 필요하다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보여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훌륭한 퍼포먼스로 기획해야 한다.**

교사는 투쟁을 할 때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우리선생님이 가두

에서 머리띠를 하고 주먹을 하늘로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교육적일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누가 봐도 “아, 저들은 무척 교사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전술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전술과 운동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슬로건만 좋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교조는 교사다운 전술을 연구할 의무가 있다.

VIII. 현재 전교조의 상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교조가 담당해야 할 일이 이와 같다면 현재 전교조의 상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전교조가 전문직 조합의 역할을 감당한 경험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논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부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교조에는 산재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뽑아도 이렇다.

1. 은행 저금식 운동

프레이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은행 저금식 운동을 지금 전교조가 보여주고 있다. 은행 저금식 운동이란 지도부가 대중들을 조직의 대상,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강령과 지침을 주입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은행 저금식 운동은 결국 다음과 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1) 투쟁 관료주의

전교조의 조직원리는 이른바 민주집중제다. 그런데 이 민주집중제는 민주보다는 집중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조직 원리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민중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결집한 의사는 힘있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뜻이다. 세상일이란 그리 간단한게 아니라서 갑도 하고 을도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이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은폐하는 것이다.

민주집중제는 과거 현실사회주의권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하여 개발한 정치제도다. 그리고 그 실상은 민주집중제가 아니라 관료집중제가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과 토론의 문화는 실종되고 관료제의 단점인 비효율과 부패만 남았던 것이 민주집중제다. 전교조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교조의 모든 사업은 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본부에서 지부로 지부에서 지회로 하달된다.**

위원장이나 지부장 그리고 대의원은 일단 한 번 선출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수단이 없다. 전교조의 조직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나름대로 가장 민주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시민적 통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 전교조의 조직은 민주주의 점수에서 결코 평균이상이 되지 못한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권위주의, 전체주의는 항상 “도달해야 하는 이상향의 건설”, 혹은 “단결해서 물리쳐야 할 막강한 적”을 근거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성장해왔다. 전교조의 조직이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이 강화된 배경도 역시 이와 같다. 전교조는 항상 투쟁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투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유보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고착된 체계를 투쟁 관료주의라 명명할 수 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의 의견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투쟁시절 형성된 언더그라운드들의 소수 엘리트 집단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2) 정파주의

정파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폐쇄적인 정파주의다. 폐쇄적인 정파주

익는 비밀주의의 산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군사독재 시절 폐쇄적인 정파주의는 운동의 유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개되어도 전혀 일신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오늘날까지 이런 비밀스러운 정파조직이 운영된다는 것은 낯선사다.

어떤 조직에서도 한 개인이 여론을 형성하고 책임 있는 자리까지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마치 무소속이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운동조직 내의 정파조직은 자연발생적이다. 그런데 이 정파조직은 시대에 따른 운동관, 전술 등에 대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그런데 비밀결사의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 십 수년 전의 정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미 정파의 근거가 되었던 운동의 목적, 목표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온존하고 있다. 지금 PD나 NL이니 하는 정파는 사실상 운동으로서의 근거는 거의 상실했다. 차라리 PD출신, NL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용어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정파는 가입의 절차도 공개되지 않았다. 비밀스럽게 연출망에 의해 새로운 조직원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다보니 정파의 구성원들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동맥경화에 걸렸으며, 새로운 정보와 흐름에 둔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둔감해진 정파원들이 조합의 요직을 계속해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정파원들이 운동 엘리트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교육운동의 장이 아니라 운동 엘리트들의 권력다툼의 장이 되고 만다.

2. 아마추어 행정집단

그렇다면 전교조는 집중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본부의 조직도를 한 번 펼쳐보라. 저 방만한 조직도는 민주도 안 되면서 집중도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조직의 현주소다.

무수히 많은 각종 실, 위원회, 국, 부는 어떤 원칙에 따라 배치된 것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 먼저 업무를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국을 배치하고 구조화한 노력은 찾을 수 없고, 그 때 그 때 무계획적으로 실, 국, 위원회를 추가하면서 방만한 조직의 모습만 보인다. 이는 마치 도시계획 없이 확장된 거대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 결과는 조합비의 대부분을 전임자, 상근자 인건비로 탕진하고 마는 현실이다.

3. 앵벌이 조직

이것은 무계획적인 회계관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조직의 유형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소득과 지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런 중요한 소득과 지출관리를 사실상 무계획적으로 집행했다. 물론 나름의 계획은 있고, 그것이 대의원대회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한 뭉치돈이 용도가 불분명한 회계계정으로 잡혀있다.

번듯한 정기간행물, 학술지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출판사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수원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 할인 혜택 있는 서점, 문화시설 하나 없는 조합에, 100억이 넘는 회비를 받아 온 지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번듯한 빌딩하나 가지지 못한 조합에 다

른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더 많은 회비를 내는 조합원들의 인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농성현장의 사발면 값으로, 집회에서 하늘로 날리는 풍선 값으로 소중한 조합원의 십시일반을 탕진하지 말지어다.

IX. 교육운동의 시작은 전교조 개혁부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교조가 교육운동의 주체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전교조를 개혁하는 것이 교육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지경이다. 전교조 개혁의 과제가 어찌 여기서 제시한 것 정도 뿐이겠냐만, 일단 필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한 것 몇 가지만 적어본다.

1. 투쟁보다 먼저 성찰과 반성을

투쟁은 기본적으로 안티테제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살펴 보았듯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안티로는 부족하다. 신자유주의는 보수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좌파가 보수로 내몰려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지금 진보진영 모두 생산의 경험이 부족하고 자랑해왔던 도덕성도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쟁이 아니라 뼈아픈 성찰과 반성이다. 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바라는 이상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했어야 했으며,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등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현 집행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얼마나 전교조가 갈 길이 먼지 알 수 있다.

“전교조는 올 4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6년 2대 핵심과제로 1)교원평가 저지-학교 자치 실현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 2)아이들 살리기 운동 전개를 확정하였고, 그 외 현안사업으로 교장임용방식 개악 저지와 교장선출보직제 토대 마련, 최대시수 개념의 표준수업시수 제정 및 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 상향과 법정정원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과 사학민주화투쟁 지원, 참교육과정 쟁취, 참교육실천사업 및 통일사업 활성화를 결정하였습니다.…하반기 역시 지금까지처럼 한 치의 흔들림없이 사회 진보, 교육 개혁,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일상적인 참교육실천활동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투쟁과 일상 사업을 분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있다는 증거다. 이제는 소위 일상 사업이 바로 전교조와 교육운동 그 자체이며, 투쟁은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임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교창사가 투쟁회피주의자라고 비판하면 당당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다라고. 가능하면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2. 이제는 포지티브 운동을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은 잘못된 길이다. 공공성의 교육, 공교육 그 자체도 많은 불행을 양산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전교조의 설립 이념은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공교육을 수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 자체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지금까지의 교육관을 모두 디플트로 돌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교육론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먼저 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좌파

와 우파가 모두 남아버렸다. 먼저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좌파다운 모습이다.

1)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 대안적 교육 제시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는 전교조의 면피용, 혹은 투쟁과 함께 2대사업 이런 식으로 배치될 일이 아니라, 늘 힘주어 행해야 하는 주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교육 연구소는 본부로부터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정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교사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명실상부한 대안적 교육과정의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

전문학자가 전념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장 교사의 노하우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전교조는 그 동안 전자에 너무 냉소적이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새 교육과정 개발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2) 노동운동에서 학술 문화운동으로

그 동안 전교조가 전문학자에 냉소적인 것은 노동운동 지향성 때문이었다.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학자나 교육자가 “현실세계의 노동자”를 닮아가려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혁명은 노동자가 인텔리가 되는 것이 그 역이 아니다.

전교조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학술 문화운동의 중추로서 서야하며, 거기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사답게 권리와 영역을 찾고, 학자가 학자답게 권리와 영역을 찾을 때 노동자는 표준화된 기계로서의 위치를 거부하고 나름의 장인으로서의 영역을 찾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분업화된 기계인체로 두고 단지 공장의 소유만 집단으로 한다고 해서 노동해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예리한 두뇌와 유연한 가슴

3. 민주주의의 선봉이 되자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파괴한 이념이며, 가장 아픈 굴레이기도 하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의 질서가 곧 자유이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의 논리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의 원리가 왜곡되고 강자의 논리가 적용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의식이 보편화되면,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논거가 될 것이다.

1) 청소년 인권의 보루

이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인권의 든든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가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창설 초기 같은 수많은 학생 우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교조에 대해 가장 냉소적인 집단이 오히려 학생들이라는 현실에 끔찍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의 인권의식 변화 촉구

전교조는 홀로 청소년 인권의 보루가 될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 청소년 인권의식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에게도 이를 촉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교사문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전교조가 교사를 비판하고, 또 스스로를 비판할수록 수 많은 우군을 얻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애초에 전교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집단 내부의 양심적 내부고발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때 고발당해야 할 행위가 독재 꼭두각시 노릇과 촌지였다면, 지금 고발당해야 할 행위는 청소년 인권 침해와 거기에 대한 동조 내지는 묵인이다.

3) 민주주의는 조합 내부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전교조 스스로 떳떳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부 의사소통구조를 개선하고, 평 조합원들의 통제력이 지도부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4. 전문직다운 책임을 지는 조합

5. 은행 저금식 운동에서 문제 제기식 운동으로

6. 거대한 투쟁에서 일상적이고 사소한 변화를

X. 전교조 조직 혁신에 대하여

1. 신자유주의자에게서 배우자

신자유주의가 맑스의 잘못된 예언을 비판하며 내세운 자본주의 이후의 지식사회에 대한 전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배울점은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지식이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 경영, 조직 혁신에 대한 내용이다.

1) 조직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지식 정보사회에서 조직은 지식인들이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조직은 지식인들을 필요로 하고, 지식인들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조직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조직은 단지 조직의 유지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구성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직이 되고 만다.

2) 조직의 목적은 어떤 형태이든 효과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목적이 달성되거나 바뀌면 조직도 바뀐다. 이 목적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효과일수록 조직은 효율적이고 결속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효과가 확인되면 조직은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효과가 감소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조직은 내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조직의 목적은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하다.

그런데 조직의 목적은 무작정 수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는 조직의 내외 조건, 조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식과 지식인의 범위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것 등을 감안하여 조직이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직은 성격이 불명해지고 방향이 모호해지며, 마침내 도태되고 말 것이다.

4) 조직의 구조와 업무는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

조직은 조직의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1차 기준은 목적 달성이 되어야 하지 구성원들 간의 친소관계, 관행 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업무는 잡무다. 잡무는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해당 업무를 주목적으로 삼는 다른 조직에게 넘겨야 한다. 즉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들이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5) 조직의 구조는 수평적 네트워크라야 한다.

조직들은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하지만 조직의 내부도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식사회의 조직은 집산주의적 공장과는 다른 조직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이며, 단지 고용되거나 소속되어 있을 뿐 노동자가 아니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의 흐름에 따라 한시적인 우선권만 주어질 뿐이다. 조직은 최고 경영자(CEO)를 두지만 이는 단지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만 할 뿐 전권은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다. 전통적인 조직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그림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신자유주의의 조직론은 보수진영과도 적대적이다

이런 점 등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의 조직론은 보수진영과 친화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이다. 이는 왜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묘한 긴장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사라지지 않는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다. 신자유주의는 안정보다는 불안정을 선호한다. 조직은 안정되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결성, 해체, 재결성을 반복하고 구조화 재구조화를 반복하는 존재다. 현재 신자유주의자들 눈으로 볼때 우선 파괴되어 마땅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관행과 낡은 조직들이다. 혹은 그런 것들이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 경도된 얼치기 신자유주의자들은 수입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느라 애초에 비대하지도 않았던 공공 복지부문의 축소를 외치고 있지만, 모든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얼치기인 것은 아니다.

2. 전교조는 교사들의 조직이다.

이제 이런 조직 관리론의 관점에서 전교조를 바라보면 전교조의 모든 문제점의 해답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납득할 만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는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은 전교조는 느슨한 연대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명백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1) 전교조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조직인 한 전교조 역시 이 조직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조직이란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교조에 어떤 지식인들이 결집 되는가 분명히 해야 한다.

모두에 밝혔듯이 전교조는 교사들의 조직이다. 전교조는 오직 교사들만 결집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교사라고 하는 특정한 지식인들을 결집시킬만한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교육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이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이라는 지식노동에 대한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철저히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업무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 기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거나 운동을 전개하는 업무들이 포함된다. 이런 업무들이 전교조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다.

2) 전교조의 잡무는 무엇인가?

잡무는 말 그대로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잡무란 하찮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굳이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사의 잡무는 각종 페이퍼 워크 같은 소모적인 사무, 청소 등과 같은 일상 관리 업무 등 비교육적 업무가 포함된다. 물론 이런 일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로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또 조직의 구조가 이런 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혁신되어야 한다. 혁신의 방향은 조직의 구조를 이런 행정업무가 아니라 교육업무 위주로 재편하고, 각종 행정, 관리 업무는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조직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잡무는 무엇인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운동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노동운동, 통일운동도 모두 잡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교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전교조가 전념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잡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과 그것이 전교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만약 노동운동, 통일운동이 전교조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면 전교조가 교사들만의 조직일 이유가 없으며, 교사들만으로 조직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마땅히 교육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은 노동단체와 통일단체에게 맡겨야 한다. 즉 아웃 소싱 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 개인이 노동운동에 또 통일운동에 간여할 수 있고, 또 그런 운동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전교조가 또 그런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전교조가 주 업무로 전담해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에도 전문성이 없고 교육운동에도 전문성이 없는 애매한 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 경실련과 참여 시민연대가 어째서 화려한 잠깐의 전성기만을 거친 채 쓸쓸히 몰락해 갔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루한 구 운동권이라면 이런 견해를 개량화라고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영역운동의 개량화다.

3) 전교조 조직의 상태

그렇다면 현재 전교조 조직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를 몇 마디로 정리하면 백화점식 업무와 수직적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전교조 활동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 노동운동'이라는 용어에 이미 이러한 백화점식 업무가 조짐이 보인다. 여기에 통일운동이, 인권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환경생태운동이, 그리고 여성운동이 결합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조직원의 대부분은 통일운동가도, 노동운동가도, 생태·환경운동가도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육운동가도 아니며 단지 교사일 뿐이다. 이들은 전교조의 강령도 모르며 더더군다나 이런

운동도 모르며,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교사들의 연대라는 것, 그리고 참교육 정도일 것이다.

이런 등등등의 운동들이 현 정세에서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등의 논쟁은 비생산적이니 관두도록 하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저런 등등등의 운동을 전교조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백화점식 조직이며 도태되는 조직의 모습이며, 실제 도태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전교조의 조직은 매우 낡은 전형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원장 이하 각 실국을 거쳐 지부 실국 지회 실국, 그리고 분회까지 이어지는 다단계의 관료제 체제는 조합원과 조합 지도부와의 거리를 매우 멀게 만든다. 당연히 지도부의 메시지는 조합원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조합원의 목소리는 왜곡되어 전달된다. 현재 전교조의 조직도를 보면 개혁을 요구하기는 커녕 개혁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낡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에서 나열한 백화점식 운동들이 저마다 나름의 관료제 조직을 갖추고, 나름의 전임자를 보유하고, 나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주도하고 개혁을 논위하기 어렵다. 전교조의 운동은 마땅히 자기 혁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전교조의 조직혁신

1) 핵심 업무에 집중

전교조의 핵심 업무는 무엇인가? 핵심 업무는 중요한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고귀한 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직의 핵심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혁신은 바로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업무가 아닌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고귀한 업무라 하더라도 아웃소싱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핵심 업무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단위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단위가 실제 교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산출을 하고 있는가? 만약 의미있는 산출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핵심 업무가 아니다.

2)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명령 계층 수를 최소화하는 것, 즉 조직을 가능하면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의 원칙이다. 그 이유는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이 주장하는 “모든 명령의 전달 단계마다 잡음은 두 배로 늘어나고, 메시지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원칙만으로도 충분하다.- 피터 드러커

이는 단지 신자유주의자의 목소리로 치부하기에는 큰 울림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의 조직이 방만하고 권위적인 관료제 계선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위원장에게까지 전달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1년에 몇 차례 열리지 않는 대의원 대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이미 간부들이 결정한 사실을 추인하거나 단지거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목소리는 어떻게 지도부로 전달되는가? 분회-지회-지부

집행위-지부-상임집행위-중앙집행위-중앙위원회-위원장-대의원대회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평교사의 목소리가 교육부장관에게 전달되는 통로와 비슷한 단계다. 이런 과도한 관료제 조직을 간소화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편의 내용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때 그때 정치논리에 따라 난립한 각종 위원회들을 모두 정리하고 투쟁, 사업 위주의 전임자, 상근자의 수를 줄이고 이를 전문 연구 인력과 지회 관리업무에 할당해야 한다. 설립별, 학교급 별로 지나치게 상세화된 지회들도 지역별로 통폐합해야 하며(결국 영역다툼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운동을 운운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지회에 전임자들을 두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즉 전교조는 각 지회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이며 본부는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와 지부의 조직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 체계를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직 운영을 경직되게 하기 때문에 이를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대신 이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대의원 대회의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

이것은 혁신과 무관한 낡은 관료제 조직들조차 기본으로 지키던 것들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재무관리는 엉성했으며 비전문적이었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이었다. 재무 관리는 담당 전문가에게 맡기며, 이를 교사가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비는 조합원들의 피땀이라는 생각 하에 최대한 절감하며 전국 집회 등에서 버스대절 따위로 탕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적립금은 그 용도를 분명히 하여 눈먼 돈 처럼 함부로 빼서 쓰지 못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적립금을 정률제로 정하여 일정한 적립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회비 1% 중 회관건립 적립금(0.2% 향후 5년간), 참교육 재단 운영 및 적립 기금(0.15% 향후 10년간 임시), 경상경비(0.4%), 투쟁적립금(0.1%) 등.

4)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운동 개발

운동은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주제는 참신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이라야 하며, 운동 방법 역시 창의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전교조는 구태 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생태운동가들의 3보일배가 학생들, 심지어는 정치인들에게까지 보급된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 또한 지울 스님의 무작정 떼쓰기 방식의 단식투쟁이 오히려 환경운동에 대한 반감만 높였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가 제기하는 운동 주제는 그 주제를 교육분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주제를 내세우지 못하고 반대로만 일관하고, 결국 현상유지를 위해 운동동력을 탕진하는 것은 최악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강고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 투쟁도 필요하지만 이때는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투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들이 모인 집회에서 붉은 머리띠, 난무하는 깃발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질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80년대의 추억은 이제 가슴속에 묻어두자. 이미 20년 전 일이 아닌가?